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북 유리공장 시찰...생산현대화 또 지시(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유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유리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홍영철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이 동행함.
 - 김 제1위원장은 대관유리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광학측정기재들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연일 평북 군수공장 방문...'현대화' 지시(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소재 군수공장으로 알려진 '허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의 총조립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둘러보면서 생산한 기계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 특성을 파악한 후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나흘째 평북 시찰...이번엔 軍산하 술공장(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인민군 산하 룡문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술공장에서 물여과공정, 술생산 및 포장공정, 저장고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모든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됐으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내각 부총리에 임철용 추가 임명(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임철용을 부총리에 임명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22일 발표됐다고 보도함.
 - 북한은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내각 간부를 새로 임명하면서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등 4명을 부총리로 발표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자강도 인민위원장을 지낸 김덕훈을 부총리로 추가로 임명함.



- **北 김정은,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시찰(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남도의 명승지 연풍호에 있는 과학자휴양소 건설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8일 룡문술공장까지 나흘 연속 평안북도 내 군수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방 행보를 계속하며 작년 8월 연풍호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휴양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1월 평안남도 평성의 국가과학원에 이어 연풍호를 방문해 휴양지 건설을 거듭 강조함.

- **北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리모델링 지시(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가야금, 서예, 컴퓨터, 수영, 농구 등을 배우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이곳에서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건물을 개진(리모델링)을 지시하고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 건재로 다시 시공하며 모든 시설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주자"고 말함.

- **北 '아동절' 맞아 김정은 '어린이 사랑' 부각(6/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2면에 실린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자애롭고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라며 "원수님(김정은)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고아원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공급하기 위해 수산사업소를 만들도록 하고 허약한 고아들을 군인 전용 병원인 대성산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살피도록 했다고 전함.
 - 신문은 1일 4면에도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유치원 방문 기사와 평양 3월 3일탁아소를 소개하는 기사 등을 실으며 아동절 분위기를 띄움.

- 김정은 동향
 - 5/26, 김정은 黨 제1비서,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5.26, 중앙통신·중앙방송)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5.27, 중앙통신·중앙방송)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춘거리 경기관·경기장들과 평양체육관에 체육기재들과 설비들을 전달(5.27, 중앙통신·중앙방송)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체육기재들과 비품들을 전달(5.27, 중앙통신·중앙방송)



- 5/28, 김정은 黨 제1비서, 용문술공장 현지지도(5.28, 중앙방송·중앙통신·평양방송)
- 5/29,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시찰(5.29, 중앙통신·중앙방송)
- 5/29, 김정은 黨 제1비서, 이천군 신당 축산전문협동농장 박연하 등에 감사 전달(5.29, 중앙방송)
- 5/31,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5.31,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6/2, 김정은 黨 제1비서, '국제아동절(6.1)'을 맞아 평양애육원을 방문(6.2, 중앙통신·중앙방송)
- 6/2, 김정은 黨 제1비서, 싹섬개발사업 현지지도 및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 물미끄럼대 관람(6.2, 중앙통신·중앙방송)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의 백승의 원천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이라며 '黨 중앙총 2013년 3월 전원회의 기본정신(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승리 이룩)'을 강조(5.21,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삼지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 보존사업 현지 요해(5.28, 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5월 28일 '블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5.30, 중앙통신·중앙방송)
- '혁명전통을 흠시하고 외면하면 사상이 병들고 혁명이 곡절을 겪게 된다'고 '백두의 혁명전통 계승발전과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차단 위한 혁명전통교양 강화'를 강조(5.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 저작(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1986.5.31) 발표일을 맞아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대백과전서'라고 강조하며 '오늘 김정은 영도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5.31, 중앙통신·노동신문)

나. 경제

- 중국인 대상 北 회령시 버스관광 27일 시작(5/26, 조선중앙통신)
 - 중국인을 대상으로 두만강과 접경한 함경북도 회령시를 구경하는 당일치기 버스관광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통신은 "김정숙(김정일 국방위원장 생모) 동지의 고향인 회령시에 대한 제1차 관광이 27일부터 시작된다"며 "관광은 중국에서 버스로 출발하며 기일은 1일간"이라고 밝힘.



- **北, 식량 증산 총력... '새 농법 도입 열성'(5/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평안남도 남포시 협동농장 2곳의 모내기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농장이 '정보당 10t'의 수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양 관리와 벼모 기르기에서 실적이 있는 선진방법을 수 많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함.
 - 이어 조선신보는 "경험이 많은 기존 방식으로 하면 일정한 수확고를 능히 달성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정보당 10t을 내기 힘들다"며 "경험이 적은 벼농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라고 강조함.

- **北 '마식령스키장 빨리 가자'... 관광교통 개선 '활발'(5/28, 연합뉴스;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22일 북한의 '원산~금강산지구총계획'을 소개하며 철도, 도로 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관광도시의 성격에 맞게 원산시의 중심도로를 확장하고 원산과 마식령스키장을 연결하는 25km 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포함됨.

- **"北, 오스트리아에 2억 달러 빚 못 갚아"(5/28,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오스트리아에 진 빚이 2억 달러(약 2천50억 원)에 달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오스트리아 일간 '디 프레세'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은 1987년 오스트리아와 채무조정 방안에 합의하고 1992년까지 760만 달러를 갚았지만 추가 채무상환은 하지 못했다고 VOA가 설명함.

- **북한, 중국인 관광객에 접경지역 속속 개방(5/28, 중국신문사)**

 - 북한은 27일 중국 지린(吉林)성 룡징(龍井)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두만강 국경을 넘어 함경북도 회령시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 134명을 맞이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8일 전함.
 - 북·중은 이날 개통된 회령시 당일 관광코스를 놓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지난 13일 이를 최종 승인해 중국인들의 관광이 시작되었다고 중국신문사가 전함.

- **北 "작은 광산이 이상촌 됐다"... '조선속도' 본보기(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최근 몇 해 동안 초고속상승으로 몇 단계 연속 뛰어오른 3월5일청년광산은 눈덩이처럼 재부를 불쿠고(불리고) 전혀 없던 새로운 공업을 연속 새끼 쳐 오늘은 하나의 거대한 첨단수준의 공업개발구로 면모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평가함.

- **"아일랜드 NGO, 작년 24억원 대북 지원"(5/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작년 북한 주민의 식량·식수 개선 사업에 240만달러(약 24억5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킨선 월드와이드'는 전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대북 지원 비용이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힘.

● "中, 대북 임가공품 통관 절차 간소화"(5/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북한과 임가공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지린(吉林)성은 중국 기업의 위탁으로 북한에서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통관을 간소화한 사실을 밝힘.

● "北, 함북 회령시 서양인 관광객에도 개방"(5/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 대한 중국인 버스 관광을 허용한 데 이어 서양인을 포함한 다른 외국 관광객에도 이 도시를 개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RFA는 외국인의 북한 관광을 주선해온 중국 베이징의 여행사인 고려투어가 올해 8월 18~26일 육로로 회령시와 청진시, 칠보산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을 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양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2년 남짓 기간 10여 개소 준공)과 국토관리사업(리명수혁명사적지 주변 25만8천 그루 식수 등) 성과 선전(5.18, 평양방송·중앙방송)
-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산하 제염소들, 5월 소금생산 성과(작년 대비 1.8배) 선전(5.26, 중앙통신)
- 함경북도 청진 트랙도르(트랙터) 부속품공장에서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요즘 매일 생산계획을 1.2배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선전(5.29, 중앙통신)
- 강원도 원산제염소의 5월27일 현재 연간 소금생산계획 105% 완수(5.30,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경제대표단(단장: 리룡남 무역상, 北-시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참가), 5월29일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아사드) 면담(5.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혜산시·대흥단군·백암군·운흥군 등 양강도의 여러 공장·기업소·농장들 현지에서 요해(5.31, 중앙통신)
- 北, 마전해수욕장 개건공사(리모델링) 본격적으로 진행(5.31, 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 평양 근교서 고구려 벽화무덤 또 발굴(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평양시 근교에서 고구려 시기의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고구려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했다"며 "벽화무덤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광대산 남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힘.

- **北, 아시안게임 참가 앞두고 체육부문 '수장' 교체(5/2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내각의 체육상(장관급)을 교체된 사실이 27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체육관 등에 체육기구를 선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6일 열린 선물 전달 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훈 체육상"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아시아축구연맹, 평양서 청소년팀 축구감독 교육(5/27, 조선중앙통신)**
 - 아시아축구연맹(AFC)이 평양에서 17세 미만 청소년 체육단의 감독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감독 교육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국제민간단체, 방북 "배구연수 계획 포기"(5/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체육 지도자로 구성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감독단(Coaches Team International)이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이 단체의 루크 엘리 대표는 방북단은 대부분 대학교의 여자 배구선수들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우려와 관광객 억류 때문에 북한을 처음 방문하는 대학생들과 가족의 불안감이 컸다"고 말함.

- **北 '삶의 질' 개선 선전... "동물원 증축하고 잔디 깔고"(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자에서 4면의 3분의 2가량을 할애해 평양 중앙동물원 보수공사 현장 소식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전하며 현장공사 지휘책임자 인터뷰, 공사에 참여한 병사의 충성 맹세, 작업 성과 등 현장 소식을 6개의 기사와 2장의 사진에 담아 보도하며 동물원 재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신문은 "공사가 완공되면 중앙동물원은 인민이 즐겨 찾고 인민들의 편익이 최우선·절대시 된 문화정서 생활 거점으로 변하게 된다"며 동물원의 증·개축 공사가 주민을 위한 국가적 배려임을 강조함.



- **北 학생예술단, 노르웨이 베르겐 페스티벌서 공연(5/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학생예술단이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베르겐 국제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현지 언론과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노르웨이 방송·신문들은 연일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페스티벌 관계자들도 예술단의 세련된 연주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문학 작품 현상모집 잇달아…창작 열기 높이기(5/29, 문학신문)**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최신희(이달 17일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열린 '전국 회문학 및 TV극문학, 만화영화문학 현상모집'의 수상자 명단을 게재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시대적 명작들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6~17일 열린 전국예술인대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제하키연맹, 평양서 하키감독 교육(5/29, 조선중앙통신)**
 - 국제하키연맹(FIH)이 평양에서 북한 하키 감독을 상대로 강습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강습은) 감독들의 실무수준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 **北, 연일 과학기술 성과 선전…"생산활동에 도입"(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수한 발명성공품을 내놓았다"며 여러 분야에서 개발한 발명품을 소개함.
 - 통신은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변데기버섯(동충하초), 만년버섯(블로초), 고슴도치버섯(노루궁뎅이) 균실체의 배양방법을 밝혀냈으며 그 배양물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를 만들어 냈다"고 밝힘.

- **北 "흡연을 낮추자" 캠페인…담배 가격 '경총'(5/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하며 보건성 검열원을 인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가격을 마음대로 낮춰 피는 현상에 대한 감독이 심화되고 국가적 조치에 따라 담배 갑담 가격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 이 보건성 검열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담배 관세를 식료품 관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입 담배 흡연자 수와 판매량을 줄이고 있음.
 - 31일 금연의 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담배 가격을 높이는 것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제권투 경기대회(러시아 하바롭스크) 참가 北 선수들(금메달 1개, 동메달 3개 획득), 5월 26일 평양 도착(5.2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아시아축구연맹 주관 C급 감독강습(강사: 김영길·김진국) 진행(5.27, 중앙통신)
 - 성·중앙기관들, 체육 후원사업 활발히 진행(5.28,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평강군·이천군·연산군·문덕군·봉천·영대탄광·강계청년발전소에 각각 건립 및 준공식 진행(5.30, 중앙통신)
 - 조선축구협회, 5월26일~29일 '축구의료강습(강의: 안정혁·리학철·문시윤 등)' 진행(5.30, 중앙통신)
 - 北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비물질 민족유산(아리랑·연백농악무, 씨름, 막걸리, 김치담그기 등) 보호·발전사업 전개 및 유네스코와 세계유산목록 등록 추진' 보도(5.30, 중앙통신)
 - 평안북도 광산군, 현대적인 도서관 '미래원' 봉사 시작(6.1, 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중국, 동해 북한수역 조업 1년만에 재개할 듯(5/26, 중국해양식품망)
 - 중국해양식품망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어업관리 당국은 올해 동해 북한 수역 원양어업을 신청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어선들의 출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난 22일 지시함.
- 北, 재일동포 '끌어안기'...연일 조선총련 대서특필(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열린 조선총련 전체대회(5월24~25일)에 관한 기사로 전체 지면의 1/3 정도를 채움.
 - 조선총련은 편지에서 "우리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온몸으로 간직하면서 세상이 천만번 바뀐다 해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만을 믿고 따를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고 밝힘.
- 북일, 스웨덴서 협상재개...납치재조사 합의여부 주목(5/26,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3월 말 베이징(北京) 회담에 이어 약 2개월만에 만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6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송 대사는 회담에 앞서 "폭넓고 진지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하라 국장은 "적극적



으로 논의해 현안 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 日과 정부협상서 포괄·집중적 협의"(5/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북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북일 간 협상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됐으며 "2개월 만에 열리는 정부 간 회담에서 조선 측은 조일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협의를 계속 벌인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함.
- **北 "미군, 판문점서 적대행위 말라" 경고(5/27, 조선중앙통신)**
 - 판문점의 북한 측 위수경무장(경비책임자)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군 측은 예민한 판문점구역에서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불순한 도발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北 신문 "美 '인권타령'은 언제나 침략전쟁 전주곡"(5/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논평에서 국제공동체가 미국에 '인권재판관'의 자격과 권한을 준 것도 없는데 미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을 문제삼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 타령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을 위한 것으로 침략전쟁의 전주곡이 돼 왔다"고 주장함.
- **"북미 몽골 '트랙2' 접촉에 아인혼 前특보도 참석"(5/28, 미국의 소리(VOA))**
 - 최근 몽골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접촉한 미국 민간전문가 중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도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북일 정부 간 협상 종료...납북자 문제 등 평행선(5/28,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흘 일정의 정부 간 공식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대북 제재 완화 등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측 협상 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조선총련 건물 문제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고 전함.
 - 통신은 첫날과 둘째날 협상이 9시간에 걸쳐 이뤄진 반면 28일 마지막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가 끝나고 나서 "북한이 납치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세는 아니었다"며 양측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北·日,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日 독자제제도 해제(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일본 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일본 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 또 "일본 측은 공화국 측과 함께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 and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고 밝힘.

- **"북한, '납북의심자' 생존정보 일본에 전달"(5/30,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납북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본 정부에 의해 납북 피해자로 공인되지 않은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일부가 자국 안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30일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작년 말 북한이 복수의 경로로 이 같은 정보를 일본 측에 전해왔다고 소개함.

- **북한 송일호 대사 "조속히 납치문제 재조사 착수"(5/30, 연합뉴스)**
 -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30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송 대사는 30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위의 가동 시점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이 행동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일본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 **조선신보 "北·日합의는 평양선언 이행의 첫걸음"(5/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에서 이뤄낸 합의를 "평양선언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함.
 - 또한 조선신보는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이 이룬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양국은 조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2002년 평양선언 채택 이후 일본이 납치 문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대북 제재까지 시행해 북일 간 외교협상을 침체에 빠뜨렸다고 "대북 제재의 해제는 일본과 조선이 협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지적함.



- "北 의료진, 러 하바롭스크 연수 추진"(5/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州)가 북한 의료진을 하바롭스크주에서 연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립청일 러시아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지난 26일 바체슬라프 슈포르트 하바롭스크 주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日관방장관 "납북자 조사 검증위해 북한에 직원 파견"(6/1, 연합뉴스)
 - 일본 스가 장관은 1일 오전 NHK에 출연, 외무성, 경찰청 직원 등을 북한에 파견해 납북자 재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고 북한 측 관계자 등과 협의토록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함.
 - 그는 이와 함께 북일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납북자와 (납북 가능성이 큰) '특정 실종자'는 (관계국들이)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 이번 납북자 재조사 실시 합의로 한미일 공조 체제의 균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방부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대 駐日 美 공군기지(미사와) 배치(5월 말)는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증강 기도이며, 對北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라며 "자위적억제력 강화에 박차" 강조(5.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日 정부와 자민당의 '집단적자위권 용인움직임' 관련 전국 여론조사 실시(교도통신), 응답자 51.3% 반대결과를 강조하며 "일본반동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5.27, 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국민이 조금이라도 위안부제도를 알 수 있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에 대해 "1년 전의 망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인류를 두 번 다시 욕되게 하고 과거범죄를 또다시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5.29,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창울 쿠바 주재 北 대사, 5월22일 주재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글라디스 마리아 베헤라노 뽀르텔라)에게 신임장 제출(5.30, 중앙방송·중앙통신)
- 미국의 해상 이지스 요격시험 진행 관련 '우리 공화국을 어찌 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본토가 불소나기를 들뜨는 것을 더욱 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5.3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5월 31일 알제리 외무상(람단 라맘라)과 알제리 외무성청사에서 회담 진행(6.1,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북한군 "연평도 근해 포격설은 기만극" 거듭 주장(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북한군 포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포격이 날조라고 부인한) 우리 군대의 정당한 주장을 우겨대면서 2중기만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대변인은 이어 문답에서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남한의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긴박한 상황에서 발사원점을 확정한다는 현대적인 탐지수단이 '느닷없이 가동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무작정 '북포탄 발사설'을 내돌리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 후에도 대남 비난공세(5/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자 5면 전면을 대남 비난 글로 채웠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남한 언론 매체의 삽화도 실음.
 - 노동신문은 '세월호 정국을 덮어버리기 위한 음모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로 고조된 반대 여론을 덮기 위해 '북풍 조작'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현 남북관계 최악...박근혜 정부와 해결될 것 없다"(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함.
 - 노동신문은 28일 '북남관계에 백해무익한 시대의 오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일당을 두고서는 북남관계에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자면 민족적 재앙의 근원인 박근혜 역도를 단호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김관진 장관 강력 비난(5/29,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박근혜는 군부패당과의 결탁이 큰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힘.
 - 조평통은 29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박근혜는 군부패당과의 결탁이 큰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지금 남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은 군부 패거리"라며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미쳐 있는 것도, 대내 통치와 북남관계 문제에서 실권을 거머쥐고 제일 갈개는(설쳐대는) 것도 군부"라고 강조함.



- **北 외무상, 비동맹회의서 韓·美 군사훈련 비난(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8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리 외무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책동'과 '핵전쟁연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전쟁소동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비정상적인 특대형 도발행위들은 한계를 벗어나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지경"이라고 지적함.

- **김관진 "김정은 예측불가능 통치...北 불안정성 증대"(5/3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싱가포르 상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공식 오찬 연설에서 27개국 국방장관 등 고위급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체제가 장악된 것으로 보이나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내부 모순,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스타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억류 南선교사 김정옥에 무기노동교화형(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옥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옥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힘.

- **정부, 北에 김정옥씨 송환 강력 촉구(6/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 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정부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옥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 "낮간지러운 수작"이라고 비난하며 '박OO가 계속 집권해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5.26, 중앙방송·노동신문)
- 우리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한 사건을 거론하며 '비열하고 파렴치한 비인간적 처사'라며 '괴뢰패당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야수의 무리, 초보적인 인륜 도덕도 모르는 악의 집단'이라고 비난(5.26, 중앙통신)
- 우리 軍의 '통일을 위한 5단계군사전략(4세대 전쟁 개념, 「합참」 주최 제4차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은 "범죄적인 북침통일각본, 체제통일을 노린 전쟁각본"이라고 비난(5.27,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우리 당국의 '6·4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풍조작책동(北, 4월 핵실험설·국지도발가능성 등) 강화'를 주장하며 이는 "세월호 참사 책임 등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것"이라고 선동 지속(5.27, 중앙통신·노동신문)
- 현 남북관계 관련 '박OO 패당은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반통일 역적무리, 극악한 호전광들'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면 민족적 재앙의 근원인 박OO 역도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비난(5.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장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의 회담(5.23 서울)에서의 '北 포격도발' 발언 관련 '날로 무분별해지는 대결망동을 철저히 제압하는 것은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라며 '멋없이(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격에 어울리지 않고 싱겁게) 까불어대다가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고 위협(5.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 대변인 기자회견 시 對北발언(역사 퇴행적인 나라) 관련 세월호사건과 전동차 충돌사고 등을 함께 거론하며 '사회의 모든 것이 거꾸로 흘러가게 만든 괴뢰패당의 궤변'이라며 '역사 퇴행적인 것은 남조선이고 박OO패당'이라고 왜곡 비난(5.28,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對北발언들(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역사 퇴행적인 나라, 北 포격도발 등)과 「합참」의 '통일을 위한 대북 5단계 군사전략' 공표 등을 거론 '한반도 정세를 극히 위태롭게 하는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5.28, 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세월호 참사 관련 재차 '우발적인 재난이 아니라 박OO정권에 의해 감행된 특대형 학살만행'이라며 '모든 병폐와 후진성, 반인민성과 반인륜적 정체 등을 고스란히 집중적으로 드러낸 총체적 악의 산물'이라고 지속 비난(5.28, 중앙통신)



- [「조평통」 대변인 담화(5.29)]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 때 北을 응징하지 못한 것 천추의 한, 北 도발 시 지원세력까지 응징)에 대해 "어리석은 자멸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김관진을 비롯한 괴뢰군부 패당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5.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잠수부들 일당 100만원, 1구 인양 시 500만원)에 대해 '잠수부들을 우롱하는 황당한 꾀변'이라며 "괴뢰패당은 돈밖에 모르는 추물들로 모인 집단"이라고 비난(5.29, 중앙통신)
- 우리 軍의 '통일을 위한 5단계 군사전략'(전쟁 시 특수부대를 北에 침투시켜 내부 혼란 조성 등)은 '군사적 대결,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괴뢰들의 흥심을 드러낸 전쟁선언'이라고 비난(5.29, 평양방송)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64호(5.30), 우리 경찰 당국의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행사 등 "탄압소동·파쇼적 폭거"를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정권심판' 선동(5.30, 중앙통신·중앙방송)
-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발견(5.21, 강릉시 포남동)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리한 선거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6.1, 평양방송)
- 서울고등법원의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선고와 대법원의 '남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판결(5.29)을 거론하며 '과거 파쇼 독재정권시기 조작된 모략사건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6.1, 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 한·중간 논의 6자회담 재개 쪽에 '방점'(5/27,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7일,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중 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도 6자회담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재개 추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6자회담 재개' 쪽에 방점을 찍었음.
 -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이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 재개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을 뿐 6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음.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심화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 현재 관계를 '역사상 최상의 시기'로 평가했으며,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나. 미·북 관계

- **미·북 몽골 '트랙2' 접촉에 이인훈 前특보도 참석(5/28,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소식통을 통해 최근 몽골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접촉한 미국 민간전문가 중에 로버트 이인훈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이인훈 전 특보는 작년 5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맡았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확산 위험국'에 대한 제재를 주도한 인물로, 이번 접촉에 참석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었음.
 - 한편 VOA는 이번 접촉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가 총 4명이라고 전했으나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는 소개하지 않았으며, 또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 **대북 제재법 美하원 외교위 통과...알맹이는 빠져(5/30,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을 어렵게 해 돈을 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대북 제재 강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 그러나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타 상임위의 검토·심의가 필요한 조항을 다수 삭제했으며,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빠져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그전에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안은 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113대 하원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됨.

다. 중북 관계

● 北, "중국 의식해 핵실험 못하는 듯" (美전문가) (5/27, 연합뉴스)

- 미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확산억제·군축 연구팀장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츠패트릭 팀장은 "추가 핵실험이 중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불러올 것임을 북한의 정보 담당자들이 잘 알 것"이라며 "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분노 표현 방법에 고위 당국자의 방문 동결과 적극적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이 있었다"고 지적했음.
- 피츠패트릭은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크기를 줄였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나는 북한이 그럴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미사일이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선택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 '시진핑 방한' 전후 중·북 최고위급 교류 주목(5/27, 연합뉴스)

- 한중 및 중북간 최고위급 교류의 순서와 내용이 한중·중북 관계에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이르면 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중북 간에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 과거에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혈맹'으로도 불렸던 북한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시 주석이 방한 전 전격 방북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중북관계가 경직돼 있었으나 중국이 다시 북한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연결고리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베이징 전격 방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北 합의, '2008년 합의'보다 내용 진일보 평가(5/29, 연합뉴스)**
 - 일본과 북한이 지난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회담에서 이뤄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는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시절의 양국 합의보다 여러 면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선 재조사의 범위가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에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으로 확대됐고, 생존이 확인된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거취를 협의하기로 명시했음.
 - 북한도 2008년보다 얻은 것이 적지 않은데,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의 해제, 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조치까지 해제키로 했으며 아울러 2008년 합의에는 없었던 일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이번에는 '검토 후 실시'를 명시했음.

- **일·북 합의문에 '국교정상화·과거청산' 포함 주목(5/30, 연합뉴스)**
 - 29일 발표된 일북 협상 합의문 내용 중 일본 측 이행사항의 첫 번째 항목에 양국 국교정상화 문제가 포함됨에 따라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미국-일본 간 대북공조의 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 일북 간 국교정상화 교섭은 납치문제에 강경입장인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 전에 일북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기조 아래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기에 합의문 첫머리에 관련 문안이 들어간 것은 북한의 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 오키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 단계에서 과거 청산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해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일본은 북한이 내 놓는 조사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관련 논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일북 국교정상화 관련 문구를 넣는데 일본이 동의한 것은 냉각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가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일본도 북한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음을 한국 측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하원, '韓·美·日 MD협력' 펜타곤에 공식검토 '지시'(5/27, 연합뉴스)**
 -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펜타곤에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 체제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음.

- 지난 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 모색을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음.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 외교와 군사 협력 등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진전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협력은 MD 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국방부는 29일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것이며, 미국의 MD체제를 우리가 도와줄 방안이 없다"며 미국 주도의 MD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음.

● 내일 한미일·한미 국방장관회담…정보공유 등 논의(5/30, 연합뉴스)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3국 국방장관 회담은 군사정보공유에 관한 공식 논의로, 이를 계기로 향후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는 미 국방장관과 별도로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일정 재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일본은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측은 "현재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거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음.

나. 한중 관계

● 중국, 광복군 표지석도 세웠다…시안서 제막식 행사(5/29, 연합뉴스)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29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자오정용(趙正永) 산시성 당서기 등을 만나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요청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에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이 중국 정부 주관행사로 거행됐음.
- 이번 광복군 표지석 설치로 양국은 항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역사공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6월 우리 정부의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 표지석 설치 요청에 대해 중국은 기념관 설치로 '통 크게' 화답한 바 있음.
- 장보원(張寶文) 산시성 외사관공실 주임은 이날 축사에서 "표지석은 양



국의 신뢰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으며, 일각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공식 방한이 사실상 '초입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국에 보내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 THAAD 가입하면 한·중 관계 희생될 것<신화>(5/29, 연합뉴스)**
 -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미국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외신 보도와 관련 "한국이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MD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 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는 전날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은 것으로 경고 메시지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됨.
 - 통신은 "한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모든 잠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아태지역 발전에의 공헌을 원한다면 역내 국가의 모든 합리적인 관심사와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지자체도 학습지도지침에 '독도는 일본땅'(5/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중앙정부에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교사들의 학습지도 지침에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음.
 - 사이타마(埼玉)시 교육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중학교 사회과 교사용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학습 가이드라인'은 독도,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배경을 인식시킬 것"을 중점 지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특히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 점거돼 있다"는 내용을 중점 지도사항으로 명시했으며, 이번 조치는 문부과학성이 지난 1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도록 한데 보조를 맞춘 것임.

라. 미·중 관계

- **中, 국영기업에 美 자문사와 관계단절 지시<FT>(5/26,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 컨설팅회사들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해 중국 국영기업에 맥킨지나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같은 미국 컨설팅 회사와의 관계



를 단절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최근 미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혐의로 기소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대응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됨.
- 중국 지도부는 최근 MS의 윈도8 등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외국 IT 상품과 서비스는 새로운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시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중국의 국가안보나 공익과 관련된 분야라고 밝혔음.

● 미국, 중국지도자 도·감청(中보고서)(5/27, 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군 장교를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중국 인터넷뉴스연구센터가 "미국의 중국지도자 도·감청은 사실"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9년부터 중국 대륙 및 홍콩의 컴퓨터와 인터넷 시스템에 침입해 감청·감시를 했으며 그 범위 안에는 중국의 국가지도자,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선전판공실 등이 모두 인터넷뉴스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미뤄 이번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중국, 전략적으로 미국 앞서(FT)(5/29,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중국이 그동안 미국이 지배해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의 배경과 전략을 상세히 전하며 중국의 전략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음.
- ASEAN만 해도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근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영유권 갈등이 언뜻 보기엔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실은 주변국 간 역학관계를 활용한 영리한 행보라는 것이 FT의 분석임.
- 또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개입을 꺼리는 작은 규모의 전투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중국은 주변국들에 미국의 '봉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란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미국에 "국제사회 이끌려면 제대로 하라"(5/29, 연합뉴스)

-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향후 100년 동안 국제사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중국도 세계의 만행 노릇을 해봤고 흥망성쇠의 경험과 교훈이 있고 정반(正反) 양면의 경험을 다



겪었다"며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훈수를 뒀음.

- 친 대변인은 미국이 인과 의로 세계를 이끌지 않고 무력이나 패권을 사용하면 수세에 몰릴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역사서의 문구를 인용해 우회적으로 경고했음.
- 또한 최근 미국이 중국 군인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오히려 자성해야 할 쪽은 미국"이라면서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해서 어떻게 만형 노릇을 하겠느냐"고 비꼬았음.

마. 미·일 관계

● 미국 "집단지위권 매듭 후 미·일가이드라인 개정하자"(5/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28일, 주한대사 내정자인 마크 리퍼트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예 앞서 집단지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 하지만 아베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연내 개정을 고집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집단지위권에 대한 일본 내 협의가 순탄치 않으면 내년 이후로 연기해도 좋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양국의 대중국 전략에 차이가 부각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 가이드라인은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로, 미일은 남·동중국해에서의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 변수'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日, 로펌 동원해 美하원의장에 까지 '군대 위안부' 로비(5/28, 연합뉴스)

- 2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군대 위안부와 독도, 동해병기 문제와 관련해 총력 로비를 전개했음.
- 계약 내용은 일반적인 일본 정부의 외교관계를 대변하는 차원을 넘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군대 위안부'와 관련한 2차 세계대전 관련 사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교과서 채택법안과 관련해 로비를 펴는 것이었음.
- 현재 미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위안부 기림비 건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일본은 대형 로펌들과 계약을 연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 중 한 곳인 헥트 스펜서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주미 일본 대사관과 용역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 중일 관계

● 中 전투기 자위대기 접근은 역량 과시용<日언론>(5/26,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24일, 중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공역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군용기에 30m 거리까지 접근한 것은 중국이 자국의 공군력을 과시하고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관리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도했음.
- 중국 정부는 "중리 해군이 합동훈련 중이던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자위대 항공기가 들어왔기에 긴급 발진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요미우리신문은 "중리 훈련에 관심을 두는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에 중국의 공군력 과시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열릴 미국, 호주와의 국방장관 회담과 오는 11월 일본-ASEAN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번 중국 전투기의 접근 문제를 거론해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과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방침이라 전했다.

● 中 리위안차오 부주석, 日에 "태도 바뀌야 관계개선"(5/29, 연합뉴스)

- 중국의 리위안차오(李源朝) 국가부주석은 28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계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에게 "악화하는 양국관계를 개선하려면 역사문제와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리 부주석은 "서로 중요한 이웃으로서 중국과 일본은 평화와 우호, 협력의 대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일본 경제계가 양국의 관계증진에 애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에 요네쿠라 회장은 "정부 간 접촉 재개의 기반 마련이라는 생각으로 '민간외교'를 펼쳐 관계 증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으며, 한편 이번 회담은 최근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군용기에 30m까지 접근한 사태 발생 후 상호 비방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음.

● 中日, 아시아안보회의서도 불꽃 튀는 '설전'(5/31, 연합뉴스)

-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일본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은 비난의 대상" 발언에 중국은 "사람을 암암리에 해치는 짓"이라 되받아치며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을 벌였음.
- 일본은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 및 호주 국방장관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센카쿠 갈등과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과 관련한 대중 공세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 언론은 "많은 내용이 중국을 공격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다"고 촌평했음.
- 한편, 일본은 '대화 메시지'도 전했는데,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이 "중국과의 협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일본이 잘못된 대중 정책을 바로잡아 중일관계를 개



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대답했음.

사. 중러 관계

● 중국 부주석 "중·러 통일경제구 건립 가능"(5/26, 연합뉴스)

- 대만 중국시보는 26일,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24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통일경제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말해 양국이 밀월관계를 가속하는 가운데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 리 부주석은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고도의 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으며 "두 지역의 인력과 자원, 자본 등을 잘 조합한다면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이번 발언이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러시아와 밀착을 시도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 중국-러시아 다음 달 Su-35 계약 체결(5/28, 연합뉴스)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28일, 중국과 러시아가 최첨단 전투기 Su(수호이)-35 거래 계약을 다음 달 중에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음.
- 미하일 포고산 수호이사 사장은 "곧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면 2015년부터 Su-35가 중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상하이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국방군수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중앙군사위원회 장여우샤(張又俠) 인민해방군 총장비부장이 6월에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러시아 전문가들은 "방문 기간 중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군사기술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

아. 일러 관계

● 푸틴 측근 러시아 하원의장 6월초 방일< NHK>(5/28, 연합뉴스)

- NHK는 2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이 도쿄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러시아 문화 소개 행사의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음.
- 나리슈킨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문제와 관련해 서방으로부터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제재의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로, 나리슈킨 의



장이 방일 의향을 타진해오자 대응방안을 고민해온 일본 정부는 결국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음.

- NHK는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이 2012년 12월 취임 후 현재까지 푸틴 대통령과 5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쿠릴 4개 섬(북방영토) 협상에 큰 의지를 보여 온 아베 총리가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 정비 차원이라 분석했음.

자. 기타

- **아베 오늘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집단지위권 의지표명(5/30,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30일, 아베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정권의 안보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설명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집단지위권 행사용인 방침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이와 함께, 중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 과시'를 하는 상황과 관련,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한 후 국제사회가 대북 공조의 균열 가능성을 경계하는 상황인 만큼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신문 "美 '인권타령'은 언제나 침략전쟁 전주곡"(5/27,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신문은 27일 미국이 자국의 인권상황을 외면한 채 다른 국가의 인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제공동체가 미국에 '인권재판관'의 자격과 권한을 준 것도 없는데 미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을 문제삼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 타령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을 위한 것으로 침략전쟁의 전주곡이 돼 왔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 중앙정보국이 테러 용의자를 잔혹하게 고문했다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 인권침해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인권의 불모지이며 자유의 폐허 시대"라고 비판했음.
 - 또한 "인권이요, 테러요 하면서 세계 제패 야망을 추구하는 미국의 책동은 더는 통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남을 걸고 들며 더러운 정체를 감추는 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역설했음.

- **북, 붕괴위험 아파트 보수비용 주민에 강요(5/27, 자유아시아방송)**
 -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북한 당국이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들을 보강한다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철근과 시멘트를 구입할 돈을 내라고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후 혜산시에서도 '도 설계사업소' 기술자들이 나와 아파트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건물안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검사결과 당장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거주용 아파트는 11곳이고 혜산방직공장, 혜산편직공장, 통신기계공장을 비롯해 여러 공장기업소들도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됨.
 - 소식통은 현재 붕괴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들만 초보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 붕괴위험이 높은 건물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북한 당국이 아파트 보강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백화점 옆 아파트들의 경우 기초 보강공사를 위해 매 가정세대 당 북한 돈 2만4천원, 그 외 모래와 자갈 1입방씩을 따로 바쳐야 한다고 전함.
 - 하지만 소식통들은 "현지주민들에게 돈이나 보강용 자재를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도 물의를 빚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보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을 비우고 갈 곳이 없다는 점"이라며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北 외무상, 비동맹회의서 韓·美 군사훈련 비난(연합뉴스, 5.30)**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8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불만을 표함.
 - 리 외무상은 "미국과 서방이 해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발전도상 나라(개발도상국)들을 목표로 모략적인 인권 공격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음.

- **북한 군부 불법 녹화물 유포에 발각(5/30, 자유아시아방송)**

 - 체제를 보위해야 할 북한군에 한국 드라마와 성녹화물(음란물)이 대량 유포되어 불법 녹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강력한 검열조를 파견해 발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한국 드라마와 성녹화물(음란물)이 군대 내에도 적지 않게 퍼졌다"면서 "군관 가족들이 몰래 한국드라마를 보고 남조선 말씨를 흉내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현상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검열이 불었다"고 전함.
 - 그는 "현재 인민군 109연합 검열소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군관 가족을 상대로 불법 녹화물 검열을 하고 있다"면서 "이 검열이 끝나는 대로 각 산하 구분대도 파고들 것"이라고 예상했음.
 - 최근 북한 당국은 한국에서 제작된 역사 드라마 '정도전'도 김 씨 체제를 해칠 수 있는 위해물로 보고 내부 유통을 강력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불법 녹화물들은 대부분 중국에 주재하는 군부 무역회사 간부들의 손을 거쳐 평양의 군 수뇌부까지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최근 평양의 통신원과 접촉한 한국의 대북 소식통은 "최룡해가 해임된 이유 중 하나가 그의 딸이 손전화에 한국 드라마를 입력시켜가지고 보다가 발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 소식통은 인민군에 대한 불법 영상물 단속은 지난해 초부터 강화되었다면서 한국 드라마가 사회 문턱을 넘어 고위군관들에게까지 침투되자, 김정은 지도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포착한 것 같다고 지적함.

- **北, 日괴는 손잡고 南선교사엔 중형(5/31,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지난해 10월 초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된 남한 선교사 김정옥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열려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음.
 - 북한은 지난 29일 일본 정부와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를 발표한 다음 날 남한 국민에는 징역형을 선고했음.
 - 더욱이 재판이 열린 30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도 이런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에 즉시 호응해 나와야 된다"고 촉구함.
 - 중앙통신은 재판에서 검사 측이 사형을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이 양형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비판을



-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김 씨가 선고받은 무기노동교화형은 북한이 외국 국적의 인사에게 적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무거운 형벌임.
- 북한이 김 씨에 무기형을 내린 데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남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중앙통신이 김 씨를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괴뢰정보원 첩자로 지칭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김 씨의 범죄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음.

2. 북한인권

● "북송된 라오스 탈북고아 관심 가져야"(5/28,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인권단체가 라오스에서 1년 전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 고아들의 생사확인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는 '꽃제비' 출신 9명의 탈북고아들이 강제북송된 지 1년이 되던 지난 27일 한국 내 각국 외교 공관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생사확인을 호소했다고 전함.
- 김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이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길 바라며, 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함.
- 특히 이들의 신변안전을 확인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5/29, 연합뉴스)

-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와 태국 방콕 등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러 회원국이 이 조지를 한국에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OHCHR과 회원국 간의 협의에 따라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정부가 28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함.
- 콜빌 대변인은 또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는 한국에서 유엔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몇 개월 안에 조직이나 인력 등 정확한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OHCHR은 30일 유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사무소의 한국 설치 사실을 설명할 예정임.



- **인권위 "北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환영...적극 협조"(5/29, 연합뉴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성명을 내고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의 한국 설치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음.
 - 현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한 인권 사무소 한국 설치 환영"(5/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책임을 규명할 유엔의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음.
 - 그동안 한국 설치를 위해 노력했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남한의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은 29일 "현장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 "유엔 기구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만큼 북한인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 **"유엔 北인권사무소 한국 설치에 中·러도 반대 안해"(5/29, 연합뉴스)**
 -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한국에 설치키로 결정된 가운데 중국도 '한국 설치' 방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과 관련,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인권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라는 결론을 내고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가 4월 16일 우리측에 현장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한국의 요청으로 사무국이 관련국에 의견을 물었으나, 중국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그는 "논리적으로 중국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라 이행되는 사무소 설치에 대해 사실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 설치를)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음.
 - 향후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와 관련, "100% 유엔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유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한다든가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면서 "정규직원 5~6명으로 구성된 사무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권 위반에 대한 책임규명 확보 등이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사무소 설치 목표는 금년 내가 될 것이며 장소는 (유엔이) 와서



- 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함.
- 그러나 "유엔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북한 인권 사무소의 형태나 운영방식은 몇 개월 뒤에나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국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둔 배경에 대해 사니 대변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직접적 피해자들도 많은 한국에 북한 인권 사무소를 두게 됨에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실을 감시하고 이를 기록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이라며 "현장 사무소 활동이 앞으로 정부·시민사회·비정부기구(NGO)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설치하게 된 현장 사무소의 역할로는, ▲COI 권고사항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원 강화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과 기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와 국제규범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임.

3. 탈북자

-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 넘기려한 50대, 5년 선고(5/26, 중부일보)**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힘.
 - A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한 탄광지대 작업소에서 근무하며 작업소를 탈출하려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등 보위부 일을 도왔음.
 - 당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국적을 얻은 뒤 중국에 머물던 B씨가 딸을 탈북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는 A씨를 통해 B씨를 유인, 체포하기로 함.
 - 이에 A씨는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B씨를 약속장소로 나오게 한 뒤 보위부에 넘기려 했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침.
 - 이후 한국영화를 시청한 죄로 수감된 A씨는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검찰소를 탈출해 2000년대 중반 귀순했음.
 - 귀순한 뒤 불법 사기 대출 등의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사기에 탈북 전 보위부에 협력한 혐의까지 더해져 지난해 12월 기소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씨를 북한 당국에 넘길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보위부 지령에 따라 범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어린 딸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
- **'北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취소(5/26,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국



- 민참여재판 계획을 취소했음.
- 당초 재판부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닛새간 홍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었음.
 - 그러나 재판부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참여재판 진행을 협의했지만 소송 관계인의 추가신청 증인 숫자, 기타 추가 증거 신청으로 인해 증거조사를 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함.
 - 이어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종합해 (홍씨의 사건이) 법률이 정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임.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北·日,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日 독자제재도 해제(5/29,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29일 오후 동시 발표함.
 - 이에 따라 일본은 납치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대북지원을 검토키로 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함.
 - 또한 북한은 특별조사위가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하고 일본인 유골처리와 생존자가 발견되면 귀국시키도록 하며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의 면담도 허용키로 함.
 - 일본은 이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일 간 인적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



- 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전날 협의에서 약속했다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제제 해제는 성청(省廳) 간의 조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북한의 조사 개시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뤄질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음.
 - 또 북한의 만경봉 92호가 입항 재개 대상이 아니며 재조사 합의 조건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중앙본부 건물 매각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음.
 - 스가 장관은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일본 납북자 가족, '재조사 합의'에 기대감(5/29, 연합뉴스)**
- 일본인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일제히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약속을 이행할지에 관심을 보임.
 - NHK에 따르면 납북 일본인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 시게루(滋·81)씨는 "재조사에 합의했다면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조사를 할 때 그 방법 등을 확실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설명함.
 - 1998년 니가타(新潟)현에서 한국으로 출국한 후 행방불명된 특정실종자 나카무라 미나코(당시 18세) 씨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라며 "12년 전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하는 광경이 머리에 가득하다. 조사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함.
 - 납북된 다구치 아에코(田中八重子·여·납치 당시 22세) 씨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郎·33) 씨는 "교착상태에 있던 납치문제에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 자세한 내용을 듣지 않으면 현 단계에서는 평가할 수 없고 앞으로 움직임을 주시하고 싶다"고 말함.
- **"북핵 진전 없는데..." 美 '북일협상' 일단 주시(5/29, 연합뉴스)**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납북자 문제 자체를 놓고는 일본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납북자 이슈가 전면에 부각될 경우 비핵화 정책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함.
 - 소식통은 이어 "미국은 비핵화 목표와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본 측에 납북자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임.
 -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북·일 비밀접촉이 나돌던 지난 3월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이슈에 있어 일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 내지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로, 외교소식



통들 사이에서는 세부적 합의사항과 협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함.

-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이유로 일본에게 납북자 협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임.
- 다만 북한이 대일 협상을 통해 국제적 제재국면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경우 분명한 '경고사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함.

● 한미일 대북공조 흔들리나...정부, 북일합의 주시(5/29,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음.
- 정부 당국자가 북일 합의 발표 뒤 5시간여 만에 내놓은 우리 정부 입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계속 관측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이유로 대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3각 대북공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의 발표 직전에야 합의 내용을 외교경로를 통해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합의 내용 자체는 대체로 예상돼 왔던 수준이지만 전격적인 타결과 합의 발표 소식에 정부 내에서는 당혹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음.
-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대북제재는 납치 문제가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취해진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경계했음.
- 정부 내에서는 납치문제 자체에 북일간 입장차가 있어 풀기 쉬운 주제가 아닌데다 일본의 지나친 독자행동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제어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일 합의가 앞으로 실질적인 북일관계 개선으로 진전될지는 신중한 의견이 많은 상태임.

● "北日대화, 관련국들과 조율필요...발표 임박해 韓에 통보"(5/30, 연합뉴스)

-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과 일본이 납북 피해자문제 재조사와 독자제재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납북자 문제가 일본 외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한·미·일·중·러 등 5자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힘.
- 또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는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 내지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연락을 받기는 했으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없이 (공식발표에) 압박한 시점에 받았다"고 지적했음.

- **정부 "北, 우리 납북자·이산가족 문제도 호응해야"(5/30,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인 문제에도 호응할 것을 30일 북한에 촉구했음.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도 이런 납북자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에 즉시 호응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함.
 -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라며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납북자 문제, 고령화된 이산가족 문제가 있다"고 밝혔음.

- **미 국무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지지'(5/30, 미국의 소리)**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 문제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이어 미국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았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임.
 - 사키 대변인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음.

- **"북한, '납북의심자' 생존정보 일본에 전달"〈日신문〉(5/30, 연합뉴스)**

 - 북한이 납북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본 정부에 의해 납북 피해자로 공인되지 않은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일부가 자국 안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30일 보도했음.
 -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작년 말 북한이 복수의 경로로 이 같은 정보를 일본 측에 전해왔다고 소개함.
 - 특정 실종자는 일본인 실종자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수는 470명에 이른다. 2003년 설립된 일본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 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하는 명단으로,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과는 별개임.
 - 북한과 일본은 지난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상한 뒤 29일 발표한 합의문에 납치문제 관련 조사 대상으로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명시함으로써 특정 실종자를 조사 범위에 포함한 상태임.
 - 마이니치는 북한이 정보를 알려온 데 대해 "북한 측이 특정 실종자를 귀국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그러나 북한이 "귀국시켜도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는 등 신중하게 일본의 여론 동향을 판별하려는 자세라고 소개했음.



- **북한 송일호 대사 "북일협상 상당한 진전 있었다"(5/30, 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30일(한국시간) 이번 북일 정부 간 공식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 북일 정부 간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송 대사는 경유지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여러 번 회담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그는 특히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성실히 노력해 왔으며 일본 정부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했다. 해야 할 일은 전부 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언론, 납북자문제 진전 전망에 '신중모드'(5/30, 연합뉴스)**
 - 북한의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북일 정부 간 합의가 나왔지만 일본 언론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론을 폈음.
 - 산케이 신문은 29일 북일 합의의 최대 포인트는 북한이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종래의 강경한 입장에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산케이는 북한이 조사대상을 '모든 일본인'으로 넓힌 데는 북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이라며, 2차대전 패전 전후에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수집, 패전 후 북한에 남은 일본인 등 납치 문제와 별개의 사안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 일본 측의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북한의 속내일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납치 재조사 상황에 대한 검증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 일본 부동산 업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 경매 문제,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납치문제의 해결로 간주하는 일본의 기준 등이 납치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3개의 벽이라고 지적했음.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측 대표단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문제해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주목하면서도 납치 재조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와 어느 정도의 결과에 대해 '납치문제가 해결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도쿄신문도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도 (합의를 백지화한 2008년 경우처럼) 일북관계가 악화하거나 국제환경이 변하면 조사가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 **조선총련건물 놓고 北日견해차... "日카드" 관측도(5/30, 연합뉴스)**
 - 2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납북자 재조사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문제가 "합의 조건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반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합의 내용을 해석을 달



- 리했는데, "합의문에 재일조선인 지위 문제가 언급됐다"며 "여기에는 조선총련 회관 문제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함.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해석을 재차 부정했는데, 스가 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총련 건물의 경매·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정부가 사법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음.
 - 표면적으로는 사법 행위를 이유로 들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전망이다.
 -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일본이 명시한 것도 역시 카드로 볼 수 있음.
 - 또한 스가 장관은 조사 내용의 신빙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DNA 등 증거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며 북한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해제한 제재를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밝히며 북한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장치'를 강조함.
- "일본, 평양에 납북자 조사 거점·직원 상주 검토"(5/31,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 필요에 따라 외무성, 경찰청 직원 등을 북한에 파견해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1일 보도했음.
 - 일본 측은 특히 북한의 재조사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진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경과 보고를 받는 실무협의를 정기 개최하고 평양에 일본 거점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
 - 산케이(産經)신문은 북일 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등 관계부처 직원을 이르면 다음 달 평양에 파견하고 직원의 평양 상주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함.
 - 일본 측은 1년 이내에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내놓도록 북한에 요구해 나갈 방침임.
 - 케네디 주일대사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 안보 과제"(5/31, 연합뉴스)
 -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30일 마이니치(毎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실시에 대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하며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케네디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기대를 표시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미일 간 균열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 일본에 핵·미사일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함.
 - 日관방장관 "납북자 조사 검증위해 북한에 직원 파견"(6/1,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일 북한 측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일본 정부 요원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는



의사를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NHK에 출연, 외무성, 경찰청 직원 등을 북한에 파견해 납북자 재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고 북한 측 관계자 등과 협의토록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음.
- 이와 함께 북일 정부 간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납북자와 (납북 가능성이 큰) '특정 실종자'는 (관계국들이)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 이번 납북자 재조사 실시 합의로 한미일 공조 체제의 균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건설, 지난해 240만 달러 대북지원(5/28, 자유아시아방송)**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건설 월드와이드'는 지난해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과 식수개선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28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힘.
 - 건설 월드와이드의 '201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동 단체는 지난해 북한 주민을 위해 176만 유로 즉 미화 약 240만 달러를 투입했음.
 - 건설은 황해도와 평안도 등 북한 중남부 3개도와 평양에서 식량과 식수, 위생 등 5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건설의 미국지부 크리스탈 웰스 대변인은 지난해 활동 내용과 회계 정보를 담은 연례보고서가 이날 공개됐다면서 대북사업 비용 대부분은 아일랜드 정부와 스웨덴 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함.
- **"북한에 65억 그루 나무 심기가 목표"(5/2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비영리단체 '원 그린 코리아(One Green Korea Movement)'는 북한 평양, 라선 등 다양한 지역에 10년 안에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산림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이 단체는 '65억 나무 심기' 사업을 위해 북한의 산림청과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력해 종자를 마련하고, 묘목을 키워내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단체의 관계자들은 이 사업을 위해 올 5월 초에 북한에 나무 20만 그루를 전달하고 왔으며,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잇갈 나무 5만 그루, 비



타민 나무 3만 그루 등을 북한 자원봉사자들 500명과 함께 심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오는 7월에 북한에 들어가 평양과 황해도 지역의 양묘장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임.
- 이 단체는 앞으로 비무장지대 DMZ 부근에 임농복합단지(Agroforest Complex)를 만든다는 장기적인 목표도 세웠다고 전함.

8. 북한동향

- 세월호 참사 관련 '박OO 패당이 통치위기에 처해 벗어나기 위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재차 왜곡 주장하며 '양심적인 기자, 언론인들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5.25, 평양방송/언론실태를 통해 본 반역패당의 정체)
-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 "낮간지러운 수작"이라고 비난하며 '박OO가 계속 집권해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5.26, 중앙방송·노동신문/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면할 수 없다)
- 우리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한 사건을 거론하며 '비열하고 파렴치한 비인간적 처사'라며 '괴뢰패당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야수의 무리, 초보적인 인륜 도덕도 모르는 악의 집단'이라고 비난(5.26, 중앙통신/초보적인 인륜 도덕도 모르는 악의 집단)
 - * 최근 대법원의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1960년대 말)' 무죄 선고 관련 '유신의 후예들이 활개치는 현실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고 주장(5.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반드시 결산해야 할 독재자들의 죄악)
- 日 정부와 자민당의 '집단적자위권 용인움직임' 관련 전국 여론조사 실시(교도통신), 응답자 51.3% 반대결과를 강조하며 "일본반동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5.27, 중앙통신·민주조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세월호 참사 관련 재차 '우발적인 재난이 아니라 박OO정권에 의해 감행된 특대형 학살만행'이라며 '모든 병폐와 후진성, 반인민성과 반인륜적 정체 등을 고스란히 집중적으로 드러낸 총체적 악의 산물'이라고 지속 비난(5.28, 중앙통신/특대형 참사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 MBC방송을 인용하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5.26)' 사실을 보도하며 '남조선인민들이 어디서 또 어떤 사고로 재앙을 입을지 몰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5.28, 중앙통신)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잠수부들 일당 100만원, 1구 인양 시 500만원)에 대해 '잠수부들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이라며 "괴뢰패당은 돈밖에 모르는 추물들로 모인 집단"이라고 비난(5.29, 중앙통신/실종자 구조에 나선 잠수부들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
- MBC방송을 인용하여 전라남도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5.28)' 사실을 보도하며 '세월호 참사에 이어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5.29, 중앙통신)
- 北, 北-日간 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었다'며 회담결과를 보도(5.29, 중앙통신 · 중앙방송)
 - 우리(北)측은 납치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입장이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 일본측은 현재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를 표명하였음.
 - 쌍방은 포괄적 조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 희망하는 관계자와의 면담과 관계장소에 대한 방문을 실현시켜주며 관련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日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국민이 조금이라도 위안부제도를 알 수 있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에 대해 "1년 전의 망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인류를 두 번 다시 욕되게 하고 과거범죄를 또다시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5.29, 중앙통신 · 노동신문/세계의 양심 앞에 낮을 붉히라)
 - ※ 하시모토 1년 전 망언 :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필요했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